

소통사회학의 도전과 과제

민본 21 기획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I. 세 가지 문제의식

기조발제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세 가지 소회를 피력하고 싶다. 첫 째,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의 문제를 보고자 한다. 정확히 30년 전 나는 푸코의 “언술분석”(discursive analysis)과 하버마스의 “소통검증”(discursive testing) 개념을 결합하여 “소통사회학”(discursive sociology) 또는 “소통사회이론”(discursive social theory)의 방법론을 박사논문으로 제출했었다.¹ 그 뒤 30년간 한국사회는 많이 변했다. 국가주도적 산업성장의 단계를 거쳐 민주주의를 향해 격렬하고 인상적이었던 전환기를 지나 오늘날 많은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과 권력, 지식과 실천의 관계가 핵심을 이루는 소통사회학은 어쩌면 안개에 싸인 모호한 현실을 진단하고 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동아시아의 문화전통에 소통사회학의 뜻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 째는 최근의 국제비교 연구의 결과에 관련된다. 민주화 과정에서 급격한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뽑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극심한 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² 비교 국가는 남미의 칠레, 동유럽의 폴란드, 아프리카의 남아공, 회교권의 터키, 동아시아의 한국 등이다. 이들 나라들은 민주전환 이후의 과정에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질(quality)이 관심을 끈다. 품위 있는 민주주의, 양질의 민주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되는 “시민적 질”(civil quality)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공평히 배분하는 “사회경제적 질”(socio-economic quality)이 핵심적이다. 중요한 발견은 1) 정치체제의 소통역량이 가장 낮은 곳이 한국이라는 점과 2) 소통역량의 변수가 민주주의의 질에 매우 현저한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막힌 소통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품위 있는 양질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 째는 소통장애의 현실이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6월, 방대한 규모의 촛불시위는 한결같이 시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부재를 질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계기로 다시 분출하는 쟁점들도 결국 소통의 구조적 장애로 모아지는 것 같다. 물론 소통장애는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¹ Discursive Method and Social Theory, Ph D dissertation a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linois, 1970

² 이에 관해서는 2008년 5월 16일, 경북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이론사회학회 춘계대회에서 요지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의 핵심이 소통이라 할 때, 정치권에서 소통이 막힌다면, 다른 부분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소통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

1. 새로운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학이 사회발전의 길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마도 1980년대의 과잉기대를 연상시킬 것이다. 변동하는 사물의 뒤를 쫓아 설명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견해가 있다. 학문의 전문화는 필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학문과 현실의 내재적 긴장에 주목한다면, 현실의 전개과정 안에서 열리는 미래를 미리 포착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를 압도할지도 모를 모호성, 혼란, 불안, 공포를 벗어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눈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학문은 현실의 모순에 날카롭게 부딪치면서도 그 모순과 함께 열리는 새로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기 마련이다.

일찍이 서구학문은 근대성의 계몽 프로젝트를 발전시켰다. 맑스는 서구 계몽 프로젝트의 원형에 가깝다. 경로는 다르지만 콩트 이래 사회학의 시조들, 뒤르케임, 베버 등도 탁월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시대의 모순을 해부하면서 미래를 탐색하는 사유방식을 밀즈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불렀다. 그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현실을 특징짓는 전대미문의 모호성, 이질성, 복합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학적 상상력”은 익숙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폐기를 전제하는 것 같다. 한 보기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빈부격차, 이주노동, 자본이동, 산업격차, 대량실업 등이 심각할 수록 우리는 문제의 해결주체로서 국가를 상징하고 정부의 역할에 많은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 이외의 다른 주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추호의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주도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과도한 기대를 반영할 뿐이다. 유능한 지도자의 리더십, 정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부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회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진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진보의 재구성은 분명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³ 그러나 탈바꿈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특권을 부여하여 그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분류하려는 방식, 서구 진보의 사유체계 안에서 동아시아 현실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허망한 욕심과 가정, 서구에서 발견한 진보의 주체를 곧장 다른 역사,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는 착오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 공헌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와 역사 안에서 내재적으로 깊게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소인을 밖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의 계보 안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그 터전 안으로 서구의 사조를 끌고 들어와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보가 뿌리가 너무 얇아 손쉬운 이

³ 김형기, 김윤태 (편), 새로운 진보의 길, 한울, 2009 참조

념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맑스, 베버, 뒤르케임이 생각했던 근대성의 “계몽”을 일신하는 “새로운 계몽”이 필요하다. 또는 1941년 일제식민지배의 종말을 예견하면서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향해 김구선생이 주창했던⁵ “중심이론”의 새로운 버전, “통합적 소통이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의 모호성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자. 해방 이후 역사변동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잡으려면 두 차원의 발전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민국가 안의 현저한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 흐름이다. 우리 현실은 두 경로의 상호의존 또는 침투로 인하여 전대미문의 모호성, 이질성, 복합성의 증대로 특징되는 것 같다.

복잡한 사유개념의 고리들을 단순화시킬 때, 첫 번째 경로는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의 모호성으로 들어난다. 여기서 “전환기”는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전환기에는 흔히 권위주의 정권의 모순과 한계, 인권억압의 실상이 전면에서 드러나면서 공통의 적을 향한 시민집단들의 연대 투쟁은 고도의 탄력을 받는다. 과거정권의 청산과 개혁요구의 불길이 터져 시민사회에 넓게 확산된다. 때문에 역사이행의 방향이 분명한 듯 보이고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전환기 이후의 상황이 되면 시민사회의 지형이 크게 변화되어 모호성과 혼란 또는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 경향은 어디서나 발견된다. 즉 전환기에는 시민사회가 개혁에너지의 공급원으로 작동했다면 그 이후에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여러 이념, 세력, 운동이 각축하는 팽팽한 경쟁의 장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분석적으로 전환기와 전환기 이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복되거나 혼합되기 쉽다. 그러나 전환기의 핵심 과제는 선거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확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제가 결실을 이루어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의 평화적 이행이 제도화된다면, 전환기 이후가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⁶ 이 문지방을 들어서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열망과 헌신 또는 프리미엄은 현저히 하락한다. 대신 민주정부의 도덕성, 통치능력, 업적 등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과정의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환기에는 민주화의 열기에 압도되어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다양한 상징자본을 동원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⁴ 6.25 전쟁, 북한의 존재를 염두에 둔 대중의식의 구도 하에서 좌익과 우익의 구분을 전방위로 무차별 적용하는 풍조가 하나의 보기가 되겠다. 이것은 이성적 논의가 아니라 이념의 딱지를 이용한 편가르기 전략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보의 위상을 일단 좌익으로 폄하하려는 전략과 의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진보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⁵ 1941년 2월 1일 중국 중경에서 발행된 <광복> 창간호 참조

⁶ 전환기 이후가 된다고 해서 민주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민주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전환기 이후가 되면 그 이전과 비교해서 민주화가 많은 혼란과 난맥상 또는 도전에 직면할 개연성이 커진다.

런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불확실성, 모호성, 유동성이 뚜렷이 증가한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국가권력과 기성체제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사실, 권위주의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냉전체제의 교두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권력자원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된 '강성' 권위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을 깊게 응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권위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또는 '정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기성체제'(Establishment)를 뜻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1980년대에 이르러 자체의 모순과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여 무너졌다. 이로서 1987년 '민주전환'이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정권이 떠날 들고 있던 기성체제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보다 명료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기성체제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이념적, 그리고 초국가적 권력들의 중층 결합에 의해 이 체제를 이끄는 중추세력 및 연합집단들에게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세력을 차단하며 이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포장 또는 정당화하는 선택과 배제의 지배 전략을 뜻한다. 그 안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제도적, 법률적, 억압적 자원들을 이용하여 기성체제 안에 각인된 특권과 혜택 또는 차별과 억압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정치과정을 가리킨다. 권위주의 정권과 기성체제 사이에는 상호 호혜의 순환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기성체제를 이루는 재벌 권력, 미디어 권력, 학벌 권력, 종교 권력, 문화 권력 등을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하나의 몸통을 이루며 그 안의 상이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기성체제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의 불가항력적인 구조적 압력 속에서 행위집단들의 체험에 덧붙여 일종의 당연시된 - 그러나 정당화된 것은 아닌 - 집단 의식 또는 선택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민주전환은 기성체제와 정치권력의 분화를 촉발시키는 변화를 뜻한다. 그 핵심은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제도에 의해 정치지도자를 뽑는 제도의 확립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민주적 대표성, 정당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들에 의해 국가기구와 활동 안에 제도화된 특권 또는 차별을 검증하고 제거하는 개혁이 시작한다. 정경유착의 개혁, 인권유린의 과거청산, 인권억압적 국가기구의 개혁, 시민의 기본권 보장,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노동3권의 보장,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등은 대표적인 보기들이다.

그러나 전환기 이후의 상황이 되면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구도는 현저히 동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민주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정치집단의 전유물인 것처럼 대중은 인식한다. 정치의 실제와 관행이 국민의 삶 안으로 파고들기 보다는 권력획득을 위한 정치집단들 간의 과도한 대결과 야합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환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환기 이후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행정부, 정당, 국회, 정치집단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놀랍도록 저조하다. 아울러 민주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약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며 정의가 신장되리라는 대중의 기대에 정반대되는 증가하는 빈부격차, 사회적 양극화의 추세 앞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대중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비판과 냉소의 심리가 현저히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과 전략도 많은 파열음을 발생한다. 정치권력과 기성체제의 관계에 유념할 때, 민주화는 끊임없는 과정으로서 선거에 의한 국가권력의 민주화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도처에 강고히 버티고 있는 기성체제의 특권과 차별을 민주적 방식으로 검증하고 교정하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명확하며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공론의 비판적 성찰기능은 원칙상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 이후의 상황이 되면 어디서나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색깔논쟁이 판을 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의 연속 이행을 좌파로 부르거나 포퓰리즘, 과격주의 또는 근본주의 같은 이념적 딱지로 채색하여 주변으로 내모는 전략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일어난다. 시민의 참여보다는 사회질서를 강조하며 빈부격차 개선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이념적 편가르기가 성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통 대신 다툼과 혼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의 모호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 초국가적 양극화의 압력

현주소에 관하여 사회학자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점은 사회통합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양극화의 구조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이다. 그러나 이런 초국가적 변수가 국내 요인들에 매개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의 구조적 압력을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또는 방어하려는 국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양극화의 구조적 압력이란 간단히 말해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힘이 초국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개인이 이 압력에 똑같이 속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구조적 압력이 경제적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근원적으로는 권력자원에 의존한다.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조직화된 힘을 가진 집단은 적자생존의 경쟁 앞에서 크던 작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데 반하여, 그런 힘이 적거나 결여된 집단은 갈수록 게임에서 배제되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것을 우리는 권력자원의 동심원형 네트워크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있으나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방대한 비정규직 문제 또는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하청 계열에서 일하는 불안정한 신분의 빈곤 노동자의 문제가 대표적인 보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물러난 퇴직자, 해고자의 문제,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인의 문제, 또는 학생 등 청년 실업자의 문제 등도 비슷하다. 복지, 교육,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 계층의 상황도 유사하다.

이런 문제의 뿌리에는 승자 위주의 제로섬 게임의 리더십이 있다. 사회의 균열구조를 응시하고 치유하기보다는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권력집단의 행태가 사회도처에 미만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앞서 본 기성체제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념적 균열을 치유하기보다 이를 다양하게 확대재생산 하는 것이 지배전략의 핵심을 이루었고 그 전략은 전환기 이후의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열, 계층균열에 대한 대응양상도 비슷하다. 요컨대, 힘 있는 집단은 이 균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국제경쟁의 파고 앞에서 이들은 기술혁신 등으로 대응하려 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핵심부문에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청 계열의 기업들에게 순차적으로 부담을 전가시켜 경영을 쥐어짤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상승, 확산되는 성장의 국면에서는 이런 제로섬 리더십의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국면이 지나고 위기, 위험의 다양한 징후들과 함께 경제의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런 구시대적 자기파괴의 리더십이 지속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적대와 갈등이 증가하기 쉽다. 한국사회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날카롭게 변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경제성장 위주와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대립, 정부정책의 계급성을 둘러싼 반목이 심화되고 있고 여야 갈등의 수위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학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경제사회적, 정치적 양극화의 추세 앞에서 누가 어떻게 이 심각한 도전에 응전하는 효과적인 길을 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초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경쟁의 압력과 국내 권력집단들의 자기보호의 기제들이 엇물려 만들어내는 양극화의 추세를 우리는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하여 적자생존의 살벌한 세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회학의 오래된 상표라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사회학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II. 왜 소통을 강조하는가?

전환기 이후의 혼란을 조명하고 사회통합의 길을 탐색하는 유용한 키워드의 하나는 소통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집단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눈 앞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기보다는 이를 자제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때, 어둠의 터널 저 너머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열린 소통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먼저 살펴보겠다. 우선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울러 전환기 이후의 혼란을 넘어서는 화두가 민주주의의 질에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간략히 살펴겠다.

1. 소통능력 측정

소통이 두절된다는 것은 정치체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미의 순환이 막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사회분열과 함께 정치적 불신이 높고, 어떤 수단을 쓰건 간에 목전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기 쉽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이 높으면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 목표에 대한 합의도 용이해질

것이다. 정치적 타협도 용이해질 것이고 민주주의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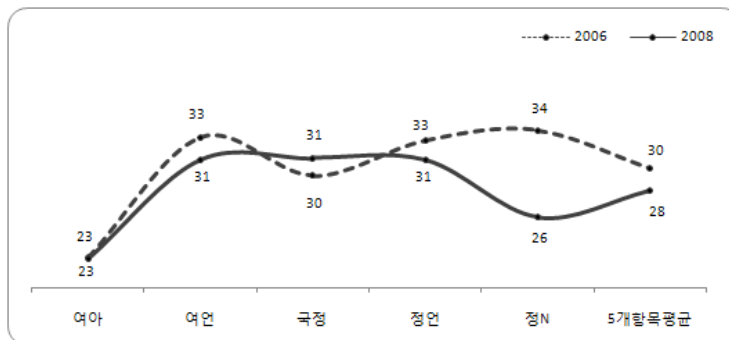
- (1) 정치영역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2) 정치영역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대의기구인 국회로 구성된다.
- (3) 국회는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다.
- (4) 시민사회는 매스 미디어(언론)와 시민단체로 구성된다.
- (5)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은 <표 1>의 8개 소통항목의 합으로 개념화한다.

<표 1>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는 일상생활에 못지않게 정치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 여당과 야당 사이 | 1 | 2 | 3 | 4 |
| 여당과 언론 사이 | 1 | 2 | 3 | 4 |
| 야당과 언론 사이 | 1 | 2 | 3 | 4 |
| 여당과 시민단체 사이 | 1 | 2 | 3 | 4 |
|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 | 1 | 2 | 3 | 4 |
| 국회와 정부 사이 | 1 | 2 | 3 | 4 |
| 정부와 언론 사이 | 1 | 2 | 3 | 4 |
|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 1 | 2 | 3 | 4 |

2. 집권층의 소통능력: 2006-2008

우선 집권층의 소통능력을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위의 설문 가운데 1) 여당과 야당 사이, 2) 여당과 언론 사이, 3)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4) 국회와 정부 사이, 5) 정부와 언론 사이 등 다섯 개 항목을 분석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06년과 2008년 소통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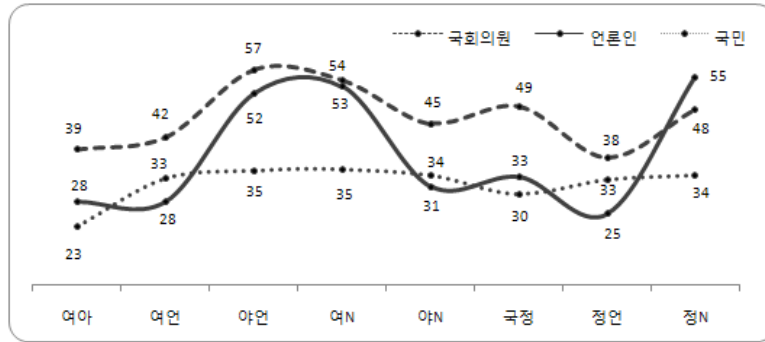
<그림 1>은 2006년 10월과 2008년 8월에 국민이 평가한 집권층의 소통능력을 가리킨다. 5개 소통항목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2006년에는 30점, 2008년에는 28점으로 나왔다. 현저한 차이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능력이 떨어진다고 국민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물론 두 정부의 소통능력은 국민이 보기에 다같이 형편 없는 실패작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형편 없는 것이 그나마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본 것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소통이 2006년에 비해 2008년에는 현저히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이건, 국민이 보기에 가장 소통이 막힌 영역은 여당과 야당 사이이다.

3. 정치체제 전반의 소통능력

다음으로는 정치체제 전반의 소통능력을 살펴보겠다. 정치체제 전반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여당, 야당, 정부가 상호간에 또는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소통을 모두 가리킨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100명, 언론인 51명이다. 이 조사는 2007년 1-2월에 실시되었다. <표 2>와 <그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평가한 정치체제 전반의 소통능력은 100점 만점에 46점이었고, 언론인의 평가는 38점, 국민의 평가는 31점이었다. 여당과 야당의 종합소통능력은 각각 46점과 47점으로 차이가 없다.

<표 2> 2006-2007 년 소통지수, 한국

| 영역 | 응답자 | | | | |
|-------------|------|------|------|-----|----|
| | 국회의원 | 여당의원 | 야당의원 | 언론인 | 국민 |
| 전체소통지수 | 46 | 46 | 47 | 38 | 32 |
| 여당과 야당 사이 | 39 | 37 | 42 | 28 | 23 |
| 여당과 언론 사이 | 42 | 40 | 44 | 28 | 33 |
| 야당과 언론 사이 | 57 | 63 | 51 | 52 | 35 |
| 여당과 시민단체 사이 | 54 | 49 | 59 | 53 | 35 |
|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 | 45 | 43 | 47 | 31 | 34 |
| 국회와 정부 사이 | 49 | 53 | 45 | 33 | 30 |
| 정부와 언론 사이 | 38 | 38 | 38 | 25 | 33 |
|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 48 | 45 | 51 | 55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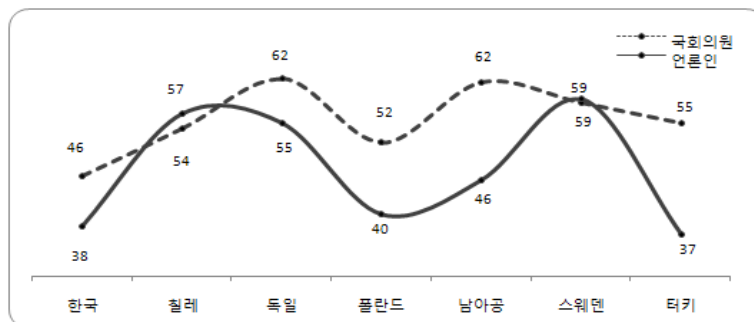


<그림 2> 2006-2007년 소통지수, 한국

자료를 심층분석 하면,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발견된다. 2007년 조사 당시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 1) 여당과 정부는 언론과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된다. 2) 반면 야당은 언론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온다. 3) 여당과 정부는 시민단체와의 소통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된다. 4) 반면 야당은 시민단체와 어려움을 겪는다. 즉 야당과 언론, 여당(정부)과 시민단체 사이에 일종의 연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 2>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사이에서 언론인의 평가가 인상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연대가 형성된 소통항목에 관해서 언론인은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거의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한편 여당(정부)과 언론,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소통항목에 관해서 언론인의 평가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보다도 더 소통이 막혔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4. 국제비교

한편, 국제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의 소통지수가 7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한국은 소통지수 50점 미만의 유일한 국가다. 다만, 언론인의 평가를 보면 한국 언론인과 비슷하게 터키의 언론인들도 정치체제의 전반적 소통능력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칠레와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과 언론인 사이의 평가에 차이가 없다. 반면, 두 집단의 평가가 가장 현저히 다른 곳은 터키이고 그 다음은 남아공이다. 한편, 두 집단의 평가가 일관되게 낮은 곳은 한국이고 폴란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3> 2006-2007년 소통지수, 7개국

Ⅲ. 민주주의의 질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소통지수의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평가에는 여러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무엇보다 국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왔다. 한국의 소통지수가 매우 낮은 것은 분명한데 그 수치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소통지수와 민주주의의 질 사이의 관계이다. 만일 소통지수가 민주주의의 질에 큰 영향을 독립적으로 미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질을 위해서라도 소통구조의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의 질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화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선거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민주화가 끝난 것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품격 있는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질은 단순히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다" (Etzioni-Halevy, 1999a: 181).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호명하기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 그러나 상호 배타적인 투쟁이 민주주의의 속성인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상호공존의 시민사회를 확립하는 것, 여기에 민주주의의 질이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게임을 넘어 국민대중에게 보다 평등한 경제적 과실과 삶의 질을 제공할 때 비로서 의미가 있다.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1. 시민적 질

따라서 민주주의의 질을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민적' 질(civil quality) 또는 자유적 질(liberal q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요체는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가를 가리킨다.

민주주의의 질에는 공정한 선거, 정책결정자에 대한 유권자의 영향력 등 여러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에 매우 중요한 측면은 자유적 가치의 하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엘리트 권력의 제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반대, 논쟁 등에 대한 관용의 풍토, 이방인과 타자의 수용을 포함한다. 서구 민주주의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구 상에는 민주주의 절차를 채택했지만 자유주의 가치를 수용하지는 않은 나라들도 있다. 이들은 형식상 민주주의지만 오직 문자를 수용했을 뿐 민주주의 정신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민주주의의 질은 낮다. 이들은 대체로 불안하고 때로는 폭력을 수반하며 민주주의 절차나 규칙을 파괴하기도 한다 (Etzioni-Halevy, 1999b. 246).

민주주의의 시민적 질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표 3> 시민적 질 측정, 질문: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체제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 보통 이다 | 별로 동의 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 1 | 2 | 3 | 4 | 5 |
| 누구나 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 1 | 2 | 3 | 4 | 5 |
| 보통 사람들도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 | 1 | 2 | 3 | 4 | 5 |
| 어느 누구도 임의연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1 | 2 | 3 | 4 | 5 |
| 누구나 압력 없이 투표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 1 | 2 | 3 | 4 | 5 |
| 정당 간의 경쟁이 결코 폭력사태로 변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2. 사회경제적 질

사회경제적 질은 민주주의가 국민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균등한 배분과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만약 민주주의 정치가 정치인만을 위한 것이거나 소수의 특권층 또는 중산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한다면 절차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현실이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사회적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에 관하여 엘리트 행동을 구성하고 또한 틀 지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정으로는 계급, 계급관계, 그리고 계급불평등이 있다” (Etzioni-Halevy, 1999a: 177). 요컨대, 민주주의의 사회적 질이란 민주주의의 효과로 인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에 관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표 4> 사회적 질 측정, 질문: 우리나라 현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일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잘한다 |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 | 매우 잘못 한다 |
|------------------------------------|-----------|-------------------|--------------------|----------------|
|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받아 빈곤층에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 1 | 2 | 3 | 4 |
| 실직자가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 | 1 | 2 | 3 | 4 |
|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것 | 1 | 2 | 3 | 4 |
|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 | 1 | 2 | 3 | 4 |
|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1 | 2 | 3 | 4 |
|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 | 1 | 2 | 3 | 4 |
|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 1 | 2 | 3 | 4 |

3. 소통지수와 민주주의의 질

앞서 밝힌 대로 여기 소개하는 경험적 연구의 핵심은 소통지수와 민주주의의 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다. 우선 소통지수와 시민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질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쉽게 밝혀졌다.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4. 소통지수와 시민적 질

우선 소통지수와 시민적 질의 관계를 보자. 소통지수와 시민적 질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모두 세 가지의 모형을 구성했다 (표 5). 이 중 처음 두 가지는 전체소통지수의 설명력을 국가변수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시민적 질 측정의 타당성을 민주주의 관련 변수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주요 관심은 모형 1과 2이고, 모형 3은 참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형 1은 연령, 성별, 소속부문, 정치적 입장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형 2는 여기서다 국가 변수를 추가한 상태에서 전체소통지수가 시민적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전체소통지수의 영향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소통지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시민적 질에 대한 평가도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개념화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통지수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보면, 먼저 모형 1과 2 모두에서 소속부문의 영향이 유의하다. 즉, 여당의원과 언론인의 평가가 야당의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또 국가 변수의 영향력 역시 매우 크다 (모형 1과 모형 2의 R^2 변화량이 0.247). 구체적으로 준거 집단인 칠레에 비해 폴란드, 스웨덴, 남아공의 점수는 유의하게 높은 반면 터키, 한국의 점수는 유의하게 낮다. 모형 2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모습도 보인다.

참고로 모형 3을 보면 연령, 성별, 국가, 소속부문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주주의 관련 변수 세 가지 (현재의 민주주의 통치 정도에 대한 평가,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와 시민적 질의 관련이 유의하게 높아, 시민적 질 지수의 내용이 무리 없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민주주의의 시민적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종속변수: 시민적 질 ¹⁾ | 모형 1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 모형 2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 모형 3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
|---|----------------------------|----------------------------|----------------------------|
| 생년 (기준: 1949년 이하) | | | |
| 1950 - 1959 | -.022 (1.394) | -.018 (1.124) | .004 (.919) |
| 1960 이후 | .015 (1.366) | -.012 (1.109) | -.014 (.899) |
| 성별 (기준: 남성) | | | |
| 여성 | -.011 (1.251) | -.098*** (1.035) | -.062*** (.823) |
| 국가 (기준: 칠레) | | | |
| 독일 | - | .408*** (1.665) | .371*** (1.379) |
| 폴란드 | - | -.034 (1.780) | .039 (1.526) |
| 남아공 | - | .057* (1.719) | .070** (1.427) |
| 한국 | - | -.061* (1.678) | -.049* (1.426) |
| 스웨덴 | - | .292*** (1.820) | .280*** (1.458) |
| 터키 | - | -.158*** (1.537) | -.043 (1.317) |
| 소속부문 (기준: 여당의원) | | | |
| 야당의원 | -.194*** (1.388) | -.234*** (1.129) | -.139*** (.968) |
| 언론인 | -.159*** (1.343) | -.229*** (1.111) | -.185*** (.871) |
| 정치적 입장 (1: 진보 - 10: 보수) | .008 (.236) | .045 (.197) | - |
| 전체소통지수 ²⁾ | .469*** (.036) | .214*** (.033) | - |
| 현재의 민주주의 (1: 완전히 비민주적 - 10: 완전히 민주적) | | | .246*** (.253) |
| 민주주의 발전사 (1: 매우불만족 - 4: 매우만족) | | | .066** (.610) |
| 인권 존중 (1: 전혀 존중 안됨 - 4: 매우 존중됨) | | | .203*** (.570) |
| R ² | 0.306 | 0.553 | 0.636 |
| 수정된 R ² | 0.301 | 0.548 | 0.632 |
| F-값 | 67.0*** | 100.7*** | 156.3*** |
| N | 1,071 | 1,071 | 1,266 |

주: 1) 6개 세부항목의 평균. 단 터키 언론인의 경우 결측값이 너무 많아 '정당간의 경쟁의 결코 폭력사태로 변하지 않는다' 제외.

2) 8개 세부항목의 평균. 단, 스웨덴 언론인의 경우 애초에 설문에 포함이 안 되어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제외.

*p <.05. **p <.01. *** p <.001.

5. 소통지수와 사회경제적 질

다음으로는 소통지수와 사회경제적 질의 관계를 보겠다. 여기서도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세 가지의 모형을 구성했는데, 처음 두 가지는 소통지수가 사회경제적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은 사회적 질 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통지수의 영향력을 보면, 연령, 성별, 소속부문, 정치적 입장을 통제한 경우 (모형 1)와 추가적으로 국가까지 고려한 경우 (모형 2) 모두에서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지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역시 앞서 분석한 시민적 질과 마찬가지로 소통지수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더불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확인해 보겠다. 먼저 소속 부문의 영향이 일관되게 큰데, 여당의 원에 비해 야당원과 언론인의 평가가 낮은 모습이다. 특히 두 모형 모두에서 여당원과 언론인의 의견차보다 여당원과 야당원의 의견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다음으로 국가 변수의 경우 모형 1과 2의 R^2 변화량이 .087로, 시민적 질에서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준거집단인 칠레에 비해 남아공, 스웨덴, 독일, 폴란드의 점수가 높고 터키의 점수가 낮다. 마지막으로 모형 2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을 낮게 평가하는 모습도 보인다.

참고로 모형 3을 보면 연령, 성별, 국가, 소속부문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재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사, 인권존중 정도와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의 관련이 높아 사회경제적 질 지수의 내용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종속변수: 사회경제적 질 | 모형 1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 모형 2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 모형 3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
|---|----------------------------|----------------------------|----------------------------|
| 생년 (기준: 1949년 이하) | | | |
| 1950 - 1959 | -.002 (1.373) | -.003 (1.266) | .017 (1.179) |
| 1960 이후 | -.053 (1.343) | -.067* (1.244) | -.044 (1.151) |
| 성별 (기준: 남성) | | | |
| 여성 | .003 (1.246) | -.057* (1.182) | -.036 (1.065) |
| 국가 (기준: 칠레) | | | |
| 독일 | - | .121*** (1.855) | .062* (1.751) |
| 폴란드 | - | .087** (2.038) | .137*** (1.992) |
| 남아공 | - | .195*** (1.912) | .179*** (1.797) |
| 한국 | - | -.042 (1.869) | -.035 (1.795) |
| 스웨덴 | - | .185*** (2.025) | .181*** (1.861) |
| 터키 | - | -.108** (1.725) | -.025 (1.675) |
| 소속부문 (기준: 여당의원) | | | |
| 야당의원 | -.435*** (1.356) | -.476*** (1.259) | -.445*** (1.231) |
| 언론인 | -.275*** (1.314) | -.295*** (1.241) | -.308*** (1.121) |
| 정치적 입장 (1: 진보 - 10: 보수) | .203*** (.233) | .218*** (.222) | - |
| 전체소통지수 ¹⁾ | .401*** (.036) | .264*** (.037) | - |
| 현재의 민주주의 (1: 완전히 비민주적 - 10: 완전히 민주적) | | | .172*** (.325) |
| 민주주의 발전사 (1: 매우불만족 - 4: 매우만족) | | | .148*** (.773) |
| 인권 존중 (1: 전혀 존중 안됨 - 4: 매우 존중됨) | | | .173*** (.724) |
| R ² | 0.459 | 0.545 | 0.549 |
| 수정된 R ² | 0.455 | 0.539 | 0.544 |
| F-값 | 123.4*** | 93.4*** | 102.5*** |
| N | 1,028 | 1,028 | 1,192 |

주: ¹⁾ 8개 세부항목의 평균. 단, 스웨덴 언론인의 경우 애초에 설문에 포함이 안 되어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제외.

* $p < .05$. ** $p < .01$. *** $p < .001$.

IV. 소통사회학의 3대 과제

우리는 위에서 7개국의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소통빈곤, 소통장애의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높다는 점, 이로부터 많은 정치적 사회적 불만과 긴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체제의 소통능력과 민주주의의 질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의 나라들에서 양질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소통장애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한국사회 현실에서 소통사회학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다.

본론으로 곧장 진입하자면, 소통사회학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제가 있다.

- (1) 소통의 구조적 장애를 엄밀한 분석으로 밝히는 과제. 이것을 우리는 비판적 분석의 과제라 부를 수 있다.
- (2) 제로섬 게임 또는 경직된 이분법을 넘어 상생의 문법을 열어 소통의 지평을 열수 있는 행위 주체와 도덕적 잠재력, 이것을 우리는 인간주체의 실천적 과제라 부를 수 있다.
- (3) 소통사회학이 지향하는 규범적 대안, 이것을 우리는 역사와 전통에 맞을 내리는 규범적 정당화의 과제라 부를 수 있다.

1. 비판적 분석의 과제

소통의 구조적 장애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으나 네 가지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통상적 의미의 왜곡된 의사소통이다. 그 핵심은 소통진입이 거부당하는 집단이나 쟁점들이 있다는 것, 또는 소통으로 진입하는 문지방에 높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의식에 작용하는 터부나 금기, 고정관념 또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일정한 색깔로 덧칠하여 낙인을 찍거나 주변화시키는 전략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실사구시의 경로를 떠나 비생산적 색깔공방이 성행함으로써 소통을 곤경에 빠뜨린다. 셋째는 권력 자원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의 문제로서 소통이 전제하는 상보성의 원리, 즉 상호이해의 쌍방향 소통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행태를 가리킨다. 이 경우, 의미의 순환은 막히고 갈등이 전면화한다. 넷째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또는 행동의 기저에 작용하는 원초적인 정감구조 또는 정서의 토대를 이해 못함으로써 생기는 소통의 장애를 가리킨다. 서구 합리주의 문화에 익숙해진 선량들이 대중의 행동에 표출되는 정감적 흐름을 '감정적',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것으로 배척하는 것이 보기가 되겠다. 이것은 소통의 이중적 문법을 하나의 잣대에 예측시킴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뜻한다.

(1) 의사소통의 구조적 왜곡

왜곡된 의사소통은 여러 차원의 선택과 배제를 수반한다. 어떤 주장은 쉽게 진입하는 데 반하여 어떤 주장은 배제되거나 주변화된다. 소통의 문지방에 사회적 편견과 습속이 작용한다. 때문

에 사회적 금기나 터부는 진입하기 힘들다. 사적인 감정, 일상적 인간관계는 공공의 성격을 획득하기 힘들다. 차별과 무시에 따른 모든 억울한 사정이 순조롭게 소통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비리, 특권, 권력남용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이 소통으로 진입하는 것도 아니다. 소통의 대상에 선택과 배제의 규칙이 작용한다. 소통의 틀을 규정하는 권력은 대부분 이 선택과 배제의 규칙으로 작동한다.

왜곡된 의사소통의 배후에는 흔히 구조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계급불평등은 단적인 보기가다. 경영자나 주주, 고위 관료, 정치인, 전문가 집단은 자신의 주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특히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는 그런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소수 인종이나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가해지는 유형무형의 학대, 차별, 편견이 있지만, 이들이 소통의 주체로 등장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영세상인, 자영업에 고용된 노동자, 세입자,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조직이나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통을 가로막는 주관적 객관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소통은 어디까지나 언어, 상징, 기호의 촘촘한 흐름을 따라 의미, 감각, 정서, 판단, 주장 등을 순환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안에 선택과 배제의 물질화된 권력이 작용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즉 소통의 구조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 조건이 언어, 상징, 기호의 흐름에 매개되지 않을 채 밖으로부터 직접 소통에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의 틀과 내용을 규정해주는 소통구조 내부의 선택과 배제의 권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하나의 과제는 왜곡된 의사소통에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의 작용을 포착하는 것이다. 아예 소통진입을 가로막는 권력이 있는가 하면, 소통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쉽게 죽이거나 격리시키는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소통을 거부할 수 있다. 또는 제기된 주장을 장기간 방치시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또는 제기된 주장이 관련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든지, 절차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쟁점을 실종, 희석, 변질시킬 수 있다.

권력의 선택성은 소통구조에 작용하는 권위주의의 문제로 파악된다.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일차적인 요인은 당면한 사회문제들에 관하여 정부가 관련 집단들과 사회적 협의과정을 개설하기보다는 국정효율을 위하여 관료적 방식을 선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즉 법을 이용하고 예산을 투입하며 공권력을 사용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국가기구들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발전목표나 정책과제의 조기달성을 위해 사회적 협의를 생략한 채 질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면, 권위주의 체제의 작동방식이 재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와의 긴 투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은 예민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 정당할 수 있는 어떤 주장이 정치적 사회적 소통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는가?
- ✓ 설사 소통과정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질식시키거나 변형시키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어떤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 ✓ 소통기회에 대한 접근이 부재하거나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은 누구인가?
- ✓ 왜곡된 의사소통을 떠받들고 있는 권위주의 작동방식의 변이는 얼마나 다양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2) 비생산적 이념공방

두 가지 소통 유형을 구별하고자 한다. 하나는 실사구시에 의해 경험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타협이나 합의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이것을 우리는 실용적 또는 실질적 소통이라 부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 안에 작동하는 균열구조를 이용하려는 유형이다. 균열에서 파생한 색깔로 상대의 주장을 포장함으로써 이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유형이다. 색깔은 균열구조의 양상에 따라 다르다. 인종이나 신분, 종교에 따른 균열이 큰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분단에서 연유하는 이념균열, 즉 '좌파'의 낙인이 효과를 낸다. 또는 지역 균열에서 파생한 '전라도'라는 딱지가 주효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포퓰리즘', '홍위병', '대중인기주의'라는 딱지가 사용되기도 한다.

낙인 찍는 전략은 원래 일탈자 또는 범죄자를 속아내는 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강한 이분법이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이 가정된다. 금기와 터부가 낙인의 대상이 된다. 마녀, 빨갱이, 테러분자, 과격주의자, 민족배반자, 반혁명분자 등은 그런 낙인이 맹위를 떨치는 사회에서는 대중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일깨워준다. 어느 곳에서나 강고한 기성체제가 버티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낙인의 효과가 대중의 의식과 정서에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것이 기성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상징적 권력자원이다. 이 자원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배세력은 도전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성과를 거둔다. 소통 대신 이념공방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환기 이후 민주화 과정의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한 현상은 비생산적 낙인의 범람이라 할 수 있다. 실체가 빈약한 구호가 정치를 움직이듯이, 내용이 가려진 낙인이 전방위로 퍼진다. 동기가 의심스럽고 도전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운동을 일단 '좌파'로 낙인 찍는다. 1997년 대선 이래 국민이 선출한 두 번의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고 공공연히 규정한다. 실사구시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이 낙인 전략이 손쉽게 큰 효과를 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낙인전략은 소통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칠 수 있는 공헌을 방해한다. 정책을 통한 승부보다는 이념이나 색깔 또는 지역에 근거한 상징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한쪽 방향의 소통

소수 집단이나 약자는 소통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나, 권력집단은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타협적인 다수는 소통에서 밀려나고 소수의 강경세력이 큰 소리를 독점한다. 때문에 소통을 통하여 공유 가능한 공통점을 찾기보다 반대로 대립과 차이를 확대 재생산한다.

소통능력의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권과 야권의 소통능력 그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100점 만점에 여권은 46점, 야권은 47점이어서 차이가 상당히 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균등한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또는 국민이 한결같이 소통이 막힌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이들의 소통이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기주장만 할 뿐 상대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에게 이런 경향은 더욱 현저하다.

이런 진단은 여야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화된 힘이 충돌하는 거의 모든 지점에 소통을 특징 짓는 상호적 시각 또는 역지사지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 노동조합과 경영자, 수도권과 지역의 자치단체, 부처 이익으로 충돌하는 정부 조직 등 보기는 많다. 이것은 우리사회 권력집단들이 각자 이익의 극대화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소통문법의 몰이해

소통은 표면은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들어난다. 그러나 소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여는 '수행적' 행동의 전제 위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점은 하버마스가 "보편적 화용론"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메시지는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적 행동은 소통의 배후에 전제되어 있지만 금방 들어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통은 메시지 이전에 일정한 인간관계, 즉 소통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정서적 공감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 공감대가 없는 곳에서는 소통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저에 작용하는 소통의 정서적, 도덕적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공감대는 엄격히 말해, 논리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훨씬 정감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일종의 원초적인 감정, 느낌, 기분, 정서로 연결되어 있는 친밀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소통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런 정감적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분석 가능한 메시지의 주고 받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소통이 잘 되려면 표면의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지만 또한 배면의 원초적이고 정서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여기서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거나 정서적 앙금이 생기면 소통은 장애에 직면한다. 다시 말해, 메시지 수준에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방을 하면서도 기저의 정감적 수준에서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수행하는 것이 소통의 문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통의 이중구조는 동양문화에서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행동의 기저에 정감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요소는 보통 메시지의 배면에서 작용하지만 만일 정감적 흐름에 큰 자극이 가해지거나 지각변동 같은 것이 생기면 소통행위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정감적 표현이 메시지의 전면에서 분출되어 소통행위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한 보기로, 서구의 많은 관찰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 놀라움을 보이며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한다. 이것은 동양인의 마음이 어떤 정서적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가를 상상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2. 소통의 주체

소통사회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 위에 서 있다. 한 사회가 변동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소통의 공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열려 있다면, 민주주의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통의 공간이 닫히면 불가피하게 소통 대신 공권력, 억압, 협박, 법치 등을 앞세우며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기 쉽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듯이, 국가안보를 이용하여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거나 경제성장에 따른 유인으로 불만을 유예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졌고 강력한 시민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학력의 한국사회에서 이런 과거의 통치전략이 효과를 거두리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경험적 질문은 남아 있다. 전환기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사회학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소통을 열고 이끌어갈 주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1980년대 민주화의 물꼬를 열고 이끌어간 주체와 같은 선상에서 소통의 주체를 탐색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표면에 들어난 행위전략과 그 배면의 도덕적 잠재력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자에 관한 한, 대답은 “아니다”가 될 것이다. 민주화의 물꼬를 여는 데 필요했던 전위적, 돌진적, 대결적 행위양식으로 소통의 지평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과 선에 대한 선명한 이분법으로는 소통이 전제하는 상보적 관계, 상생을 향한 공동체 건설이 어렵다. 소통은 설사 상대가 악을 대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입장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진술과 소명을 성의 있게 경청하는 것을 전제한다. 엄격히 말해, 소통은 악에 대한 응징과 정의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기반하되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한다. 따라서 소통은 어떤 근엄한 잣대 하나로 모든 사물을 재려는 특권 또는 획일주의를 벗어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상호작용의 틀 안에서 강제 없이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나 타협을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상대의 정복을 향한 힘의 대결 논리는 소통의 지평을 여는 데 적합하지 않다. 대신, 힘의 표현을 소통의 형식에 맞는 보다 세련되고 격조 있는 것으로 체질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주화 주체의 행위에 배어 있는 도덕적 잠재력은 아직도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이를 지지했던 세대는 오늘날 사회도처에 진출하여 중간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데, 이들을 특징짓는 공통점의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와 연대의식이 강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이 1980년대에는 매우 높았고 오늘의 시점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것이 이들을 통상적 의미의 권력집단과 구별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가 한다.⁷

소통이 요구하는 상보성의 원리는 타자를 배려하는 도덕적 정감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약하면 선의의 개인주의,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의 함정에 매몰될 수 있다.

⁷ 1980년대 대학세대와 언론이 만들어낸 386 정치인의 관계는 상당히 유기적이다. 후자가 전자를 대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소통의 주역으로 검토되는 집단은 전자, 즉 1980년대 대학세대이다.

1960년대 이래의 급속한 변동과정에서 이 행태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전환기 이후 민주화 과정의 혼란과 모호성도 이와 깊게 연관된다고 나는 위에서 논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내부에서 끊을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에 관한 진단을 유보하거나 회의적 관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지난 20년간의 민주화 경험과 80년대 대학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관점을 피력해왔다. 소통은 막혀 있고 권력집단들은 이익의 극대화에 집착하고 있지만, 막힌 소통을 여는 데 가장 필요한 타자에 대한 배려, 그 기저에 흐르는 도덕적 정감적 에너지가 유실되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다.

한 보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정당화되기 힘든 것이지만, 자살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불꽃처럼 순식간에 전파되어 타기 시작한 그 도덕적 정감적 에너지가 눈물과 비통, 죄송함, 측은함, 분노로 점철된 방대한 대중의 자발적 조문행렬로 표현되었다고 본다.

1980년대 대학세대가 정치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것도 이들의 도덕적 정감적 흐름과 정치인 노무현의 행동방식 사이에 높은 친화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번 조문행렬에 들어난 국민반응을 보면, 기성체제나 사회주류가 보여주는 마음의 구조, 즉 소수집단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세대가 대변하는 도덕적 정감적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소통의 주체로서 중민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민은 중산층으로서 민중의 정체성을 획득한 집단을 가리킨다. 여러 조사결과를 보면, 중민은 주류 중산층보다 훨씬 참여적이고 개혁적이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중민은 매우 독보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세대는 중민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민의 내포는 훨씬 다양하며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과 사무관리직, 디지털 세대를 포함한다.

아울러 소통주체의 탐색에 직접 연관된 주제의 하나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소통양식의 변화이다. 소통이 불가역적으로 상호작용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소통의 전제인 상호보성의 원칙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가 소통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소통의 규범적 기반

소통사회학의 규범적 토대는 소통의 포용성 (inclusiveness)과 개방성 (openness)에서 발견된다. 간략히 말해, 포용성은 누구든 예외 없이, 힘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조직이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개방성은 어떤 주제이건 예외 없이, 힘에 의해 진입이 거부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자유롭게 검토될 수 있도록 소통의 의제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범을 뜻한다. 이 규범은 소통행위 자체에 내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버마스). 그러나 이것은 소통 규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의 논의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규범이 동아시아 문화전통 안에 유교의 핵심을 이루는 소통의 보편적 질서에 연계되어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규범적 원칙으로서 소통의 포용성과 개방성은 조선조 건국 이래 수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고 나라의 흥망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과 인간 사이의 에너지의 순환이 바로 言路의 열림과 막힘에 달려 있다는 公論場 이론으로 발전했다.

그렇다고 모든 소통행위가 포용성과 개방성의 규범적 질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도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 주체와 소재가 제한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규범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규범의 현실적합성이 시대의 여러 구조적 특성들에 결부되어 제한되었을 뿐이다. 지배구조, 경제조직, 소통기술, 사회구성 등의 특성에 어울리는 제한된 방식으로 소통의 규범이 해석되고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현실적 조건이 변하면 이에 따라 규범의 현실적합성에도 의미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통사회학이 지향하는 사회조직의 원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통의 규범적 토대를 깊이 성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와 사회를 조직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안할 수 있다.

- (1)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계급이나 지역, 성별, 종교, 인종, 수입이나 재산 등에 관계 없이 소통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어떤 주제건 또는 관점이건 예외 없이 강제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진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 (3) 소통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상호작용, 협의로 진행되며 어떤 힘이나 강제력, 심리적 압박, 물질적 보상 등의 동기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 (4) 이런 소통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도달한 합의나 타협을 조직이나 국가의 운영에서 정책으로 수행한다.
- (5) 현저한 차이가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서로 관용을 하고 합의나 타협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협력하며 추구한다.
- (6)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 보다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상보성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여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소통사회학의 규범적 지향은 시민사회의 자기생산, 자율관리, 자치능력으로 이어진다. 홉스 이래 정치학이 통치의 기본으로 가정해온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방적 소통의 질서 하에서 시민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관리하며 다스리는 자치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고찰할 수 있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스리는 자율적 소통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의 규범적 상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의해 시민의 집합의지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활력 있는 시민사회의 터전 위에서 민주주의가 번창할 수 있고 민주정부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제도의 면에서 대중의 직접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통의 기술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형식과 절차를 거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민주주의의 제도는 물론 소통의 기술적 조건과 시민의 참여 능력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자유롭고 활력에 찬 시민사회에 있다는 규범적 명제는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도정치가 어디서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경향인데 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제도정치 행태를 정밀 검증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자유롭게 열리는 소통의 공간을 따라 자신을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소통사회학의 규범적 토대를 民本政治의 규범철학 위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전통문화 재구성의 방법론이다. 민본정치의 규범철학을 21세기의 지평에 연결시켜 재구성하는 대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본사상의 전통적 해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 입장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통적인 민본사상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왕조체제의 정치적 조건과 농경사회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가족중심의 사회적 조건 위에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루어졌고 활용되었지만, 민본사상 그 자체에는 시대의 제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즉 변화하는 현실적 조건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규범적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 (2) 다시 말해, 민본 규범의 핵심을 이루는 추상적 원칙, 즉 民惟邦本, 本固邦寧' (민은 나라의 기초이다. 기초가 든든해야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시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는 풍부한 규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 (3) 실제로 민본 규범의 호소력은 동아시아 근대의 역사에서 때로는 외세의 침투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때로는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선 민권 운동으로, 때로는 혁명운동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식인에 의해 서구사상에 결합시켜 재해석되었다.
- (4) 한 보기로, 중국의 경우, 민본사상을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으로 재해석한 지식인이 적지 않았고, 혁명에 성공한 이후 정치권력을 장악한 공산당도 자신의 시각에서 민본의 규범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선택적으로 제한된 것이며 보다 더 급진적인 재해석의 길은 중국사회 안에서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교육수준이 높고 강한 참여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정보화에 앞서 감으로써 시민사회의 활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민본의 규범을 민주화에 어떻게 연결시켜 재구성할 것인가는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소통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민본정치의 규범철학은 소통의 포용성과 개방성으로 특징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 그저 이상이나 유토피아 또는 환상이 아니라 오래된 동양문화 전통에 닿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 민본 사상이 주효했던 시대 또는 신 민본 사상이 등장했던 근대의 시기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통에 근거한 시민사회의 자율관리, 자치의 생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지식정보화 혁명이 진행 중인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이 개방적 소통의 흐름을 따라 자율적으로 시민운동을 이끌고 청취하며 이를 통해 평화적으로 집합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참여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인다.⁸

민본의 그 민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질문이 제기된다. 1980년대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으로 민중이 구성된다는 견해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딱딱한 계급 중심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민이라 부르는 실체는 과거의 “백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의 토대로서 자의식과 정체성을 획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1970년대 중반에 민의 핵심은 기층민중과 中民의 범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⁹ 현재도 이런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21세기의 민은 시민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한다. 민의 규범적 의미를 생각할 때, 시민의 의식과 행동능력이 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민본 규범의 전위적 차원을 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민본의 기본 특성으로 거론되었던 민생이나 민권, 민족, 또는 민주 등과 구별하여 民治라 부르고 싶다. 그 핵심은 시민이 스스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이 다소 낭만적으로 꿈꾸어 왔던 사회의 자기생산, 자기관리, 자기조절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소통사회학은 이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법과 공권력에 의해 질서를 확보하려는 전통적인 정치학, 행정학 등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틀로 미래를 보는 경제학 사조와도 다르다.

V. 민본 21 기획

동아시아의 민본정치 규범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제는 미완의 열린 문제다. 여러 해석과 입장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진보와 보수가 경합할 수도 있다. 가장 보수적인 입장은 민본 철학을 통치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마치 역사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민본에서 혁명의 에너지를 찾았으나 혁명 이후 장기간 통치해온 중국 공산당의 입장도 이제는 명백히 보수성을 띠고 있다. 즉 정치권력의 토대를 구성한다는 민중이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또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독자적 표현과 행동능력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민본정치가 이 차원에서 끝난다면 이것도 보수적 함의를 갖기 쉽다.

민본21 기획은 다소 전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민본전통의 규범적 타당성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눈으로 탐색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의 자기표현, 자기관리, 자기조절의 소통능력 향상이 가장 예민한 관심을 끈다.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적자면 민본21 기획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사회학이 시대의 문제들과 대면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자세로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공공연구 사업을 가리킨다. 그 핵심은 시민의 자율능력에 있지만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모호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격조 있는 양질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제를 포함한다. 한 보기로, 사회학이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에 걸쳐 잘 고안된 시민들의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조사로 추이를 측정하는 한편 공정한 전문가 포럼을 영역 별로 조

⁸ 이런 관점에서 2008년 6월 촛불시위의 의미를 적극 해석할 수 있다.

⁹ 한상진, *중민 이론의 탐색*, 문지사, 1992

직하여 종합적인 자료분석으로 “민본21지수”를 측정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 (1)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의 모호성 극복
- (2) 시민의 자율능력의 신장
- (3) 빈부격차, 사회갈등 양극화 개선
- (4) 공론장의 품질 개혁
- (5) 정치체제 소통능력 향상
- (6)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 향상
- (7)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

이를 좀 더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의 모호성 극복
주기적 전국조사를 통하여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기본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수합, 분석한다.
- (2) 시민의 자율능력의 신장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기초한 시민참여 지수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개진하는 공적 의제(보기: 위험)를 분석하며 UNDP 인간개발 지수를 확대하여 조사한다.
- (3) 빈부격차, 사회갈등 양극화 개선
사회협력지수 개발, 권력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색깔공방 등 추이 측정, 서민 복지실태에 대한 반응 조사,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반응, 정부 기업 등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세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4) 공론장의 품질개혁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 투명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전국조사를 실시한다.
- (5) 정치체제 소통능력 향상
시민사회의 요구나 불만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을 청취 분석하고 정치체제 전반의 소통 능력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6)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 향상
삶의 질, 소수자, 약자의 권리신장, 양성 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고 전국조사로 시민들의 반응을 측정한다.
- (7)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
습관화된 특권, 부조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 평가, 생활정치로의 정치 패러다임 변화 측정, 시민들의 부패체감 지수 등을 조사한다.

이 목록은 물론 가변적인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사회학의 대상은 사람들이며 따라서 민중 또는 시민이 출발점이 된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주체이자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활동

¹⁰ 사회학의 공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전문가 포럼과 시민의식조사 이중 경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사회학은 깊은 관심으로 주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학은 정치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규범적 뿌리를 민본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러 여건과 조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민본의 시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눈으로 서구의 사상과 제도를 도입, 접목, 평가하고 한국사회의 발전추세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소통사회학 또는 민본 21기획은 이런 사회학의 의지를 담아낸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1980년대 사회학은 진보의 상징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생적 진보이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¹¹ 그 전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여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사회학은 갈등사회학의 관점에서 권위주의적 억압체제에 맞서 변화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다. 이 안에 진보의 뜻이 있었고 사회비판의 에토스가 작용했다. 사회학은 민중의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민주주의를 위한 갈등의 표출을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은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개혁의 선봉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회학의 어려움은 이 글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학은 갈등을 좌악시 하는 사고와는 어울리기 힘들다. 갈등 안에 발전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조건 하에서 갈등이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가를 심각히 물어야 한다. 갈등이 계속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간다면 에너지의 낭비가 너무 클 수 있다. 더욱이 갈등전선의 한복판에 있는 집단은 불평등하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을 가진 집단이며 이로부터 배제된 많은 소외된 주변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전환기 이후의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갈등에서 발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소통의 사회학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소통사회학은 의사소통의 구조적 왜곡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로섬 게임을 넘어 상생의 게임을 지향한다. 소통은 근본적으로 상보성, 즉 상호작용의 틀 안에서 움직이며 정의를 실현하되 구성원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집단적 이기주의로는 결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반대로 흩어지기 쉬운 집단들의 배면에 있는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 이들을 결합시킬 때, 소통의 리더십은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의 리더십으로 발전한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가능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전환기 이후 민주화의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고 세계화의 압력으로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양극화도 사회내부의 통합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앞에서 1941년 중경에서 김구 선생이 발표했던 중심이론을 찾자는 호소를 소개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분열의 징후는 심각했었던 것 같다. 이것을 넘기 위한 패러다임이 있다면 통합적 소통사회학이 아닌가 한다.

한 마디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진보의 재구성도 중심이론을 찾는 자세로 시도해야 할 것 같

¹¹ 당시의 사회구성체론들에는 여러 해안이 담겨 있었다. 그 핵심을 지키되 구성을 탈바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 진보의 이념을 어디서 끌어오건 간에 그 실체는 결국 민의 자치능력을 향상하고, 권리를 증진하며 민의 참여와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심이론은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또는 토대에 맞을 내릴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¹² 서구중심주의 또는 탈맥락주의 경향을 경계할 때가 되었다.

¹² 진보의 위상을 흔히 이념이나 정책의 수준에서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소통의 차원, 인간 행위(주체)의 차원을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진보의 내용이 무엇으로 잡히건 간에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사회집단들의 일상생활에 유기적으로 접합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해가는 방식(사회구성주의)을 진보의 위상에 잘 결합시킴으로써 진보가 지식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추상적 정책 항목의 나열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상적 삶에서 그 의미를 해독하고 지지하는, 즉 행위로 연결되는 적극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대립될 수 있는 집단의 요구들을 중심에서 탄력 있게 수용하는 지평융합의 시각과 리더십이 요구된다.